

# 언론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이명박 정권 이후 대학 정책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이오현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 이후 8년 동안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과 사내 칼럼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넷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으나 양적·질적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한 담론 지형과 아울러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이 독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KEYWORDS** 대학 정책, 대학 개혁, 비판적 담론 분석, 신문 보도 분석, 신자유주의, 담론 투쟁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3053). 이 논문은 2016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leohhy@hanmail.net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지난 십여 년 사이 대학은 시장과 기업의 논리를 구석구석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시장과 기업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부, 국내 언론사, 해외 평가 기관 등의 외부 평가 기준을 대학 운영의 지침으로 삼아 왔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의 대학 본부가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이기보다는 외부 기관들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안(특히 비중이 높은 학생의 취업률과 교수의 논문 수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외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따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들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어떤 평가에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을 따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심으로 되어 있음은 이를 시사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대학 본부는 무엇보다도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sup>1)</sup> 이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등 시장 경쟁과 성과주의의 논리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들은 점수화된 항목들에 따라 점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점점 더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다. 시장과 기업의 논리와 상대적으로 더 거리를 두어야 할 국립 대학교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상호약탈적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은 현재의 대학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대학 사회는 일상의 모든 차원에서 무한 경쟁과 차등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대학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진리의 창달, 창의성 신장, 인간성 도야, 사회 정의 기여 등 대학이 추구하고 구현해야 할 가치들이라고 여겨 오던 것들은 이제 한국 대학 운영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된다. 또한 현재의 한국 대학 교수들 대부분에게 올곧게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 그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는 교육자, 대학과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전수하는 지식인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교수상이다(이도흠, 2011). 현재의 대학 평가 체계는 오히려 교수들의 연구력 성장을 장애할 뿐만 아니라 학문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십년 더 지속된다면 최소한 한국 인문학의 생태계는 복원 불가능할 것(조성택, 2011)이라는 전망조차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대학에 시장 경쟁 논리를 적용

1) 대학에 의한 교수 평가에서 연구실적과 외부 연구비 수주뿐만 아니라 학회 활동, 사회 봉사, 대학 발전 기금 모금 실적, 산학 협력 실적, 신입생 모집과 학생 취업 알선 실적, 학내외 봉사 실적 등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점수로 환산된다(홍덕률, 2004).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 '당연한 것' 또는 '바람직한 것'으로 압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대학 평가를 행하는 조직들은 점점 늘어나 대학 평가가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교육 정책 학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와 이에 부응하는 김영삼 정권과 그 이후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대학 교육 정책을 그 답으로 제시해 왔다 (예를 들면, 강내희, 2013; 김명인, 2010; 김천기, 2012; 서창원, 2011; 이도흠, 2011; 정경훈, 2011; 천정환, 2010 등).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대학의 혼란과 위기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혼란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낳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이는 대학이나 교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개혁적 주장으로 조롱을 받고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현재 대학의 문제와 혼란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을 소위 '개혁'으로 칭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 즉, 대학 현장이나 학계에서 대학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사회에서는 문제의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인식적 괴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특히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담론은 체계화된 언술(즉 지식)으로써 현실에서 전개되는 각종 사건과 행위를 인식하는 해석적 틀 혹은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홍성태, 2005). 따라서 특정 정치 주체나 제도로 생성되는 담론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안을 보는 입장과 시각이 만들어지며, 특정한 담론의 영향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이 형성된다(이기형, 2006). 담론은 전달되는 채널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언론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강진숙, 2006) 언론의 담론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인지적·해석적 틀을 생산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을 형성하려고 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2.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 그리고 언론 보도

### 1)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의 역사와 영향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정권, 그리고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탈규제, 민영화, 시장화 등을 통해 세계 구조의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이념으로, 지난 30여 년간 전 지구적 헤게모니를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과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추동하고 사회 가치와 개인의 성공을 오로지 경제 지표만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정치적으로는 자본의 세계 흐름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외 개방과 탈규제, 공공 영역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 영역들이 시장에 포섭되도록 한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원리로서는 자유 시장에서 국가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시장에서의 성공이 개인의 자질과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유포한다.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지침으로서는 경쟁이 자연스러운 인간 과정이며 경쟁적 보상 체계가 유일하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라고 설파한다. 효율성과 진보는 위계 조직을 필요로 하며 임금과 부의 격차는 진보와 발전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인식한다(양은경, 2012).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유지해 온 것은 신자유주의의 지침들이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들과 개인들의 일상적 삶 속에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사회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주체가 스스로의 자유 의지를 통해 선택·판단·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스스로 짊어지게 하는 메커니즘이자 이데올로기다(한선, 2013).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사회적 삶의 모든 문제와 공공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율적 개인을 육성한다(김천기, 2012). 즉, 자기 책임, 자기 계발, 자기 조직, 자기 경영, 자기 존중의 주체를 형성한다(서동진, 2009). 결국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조직이나 개인은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나 사회 등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방향과 기준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정진해야만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실천하게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소비주의(박정은·류용재, 2015), 자기 브랜드화(한병철, 2015), 몸의 육체 자본화(정채철, 2007), 대학생들의 스펙 경쟁(이희은, 2014), SNS 참여(이종임, 2015) 등을 자기 관리와 자기 계발로서 독려하는 사회 문화적 경향,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국가나 공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던 교육·철도·우편 등의 공공 영역이 사적 기업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편입되는 흐름 등이 나타나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사회, 조직, 개인들의 일상에 잘 스며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영역의 성격이 강했던 대학도 신자유주의의 시작과 함께 시장화·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싹은 19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 레이건 정권에 의해서다. 레이건 정권은 경기 후퇴를 공공 교육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만약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자유 세계 경제적 지도자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표준화, 책무성, 다원주의, 경쟁, 선택' 등을 강조하는 개선책들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아닌 시장이 교육 영역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Stern, 2012). 경쟁이라는 단어가 미국 대학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등장하였고, 대학 사이의 경쟁은 고용 가치가 있는 학생을 배출하지는 차원의 경쟁에서 곧 언론사들의 주도하에 대학들의 서열 순위 경쟁으로 변했다. 순위 경쟁은 대학의 체제를 평가 위주로, 또 성장 위주로 변형시켜 놓았다(서보영, 2011). 클린턴 정권에서는 정부가 교육 영역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교육 개혁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세계적 경쟁 논리를 배경으로 시장 모델을 차용한 개혁 방식을 채택하여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을 행하였다. 이는 결국 표준화된 척도로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무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가하는 체계였다. 이는 계급적 또는 인종적 차별 등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어정쩡한 개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클린턴 정권의 교육 개혁은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진짜(real) 교육 개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Stern, 2012). 서보영(2011)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의 미국 대학이 자본주의를 섬기는 고등 교육 체제로서 완성되었다고 평가한다.

영국의 대학도 유사한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 체계 안으로 흡수되었다. 1970년대 영국의 정치 경제적 지위 하락을 고등 교육의 문제로 치부하는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대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 자치에 대한 공격과 공적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기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책무성 확인의 논리로서 고등 교육의 질 관리, 질 관리의 수단으로서의 대학 평가가 실시되었다. 대학 평가는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 수단으로, 고등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적 자금 투입 기관에 대한 공적 책무성 요구 → 질 관리의 요구 → 국가 주도 평가 방식의 도입 → 질 관리에서 질 향상으로의 논리 변경 →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 분배로 연결되는 순환 논리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의 실질적 결과는 대학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윤 가치이며 경쟁을 통한 '효용성'의 극대화였다(임재홍, 2015). 임재홍(2015)은 현재의 영국 대학들은 대학 기업 지배 계층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받는 위장 사기

업이라고 평가한다.

미국과 영국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대학 구성원과 사회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은 다른 대학과의 경쟁 속에 재정과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보다는 펀드 확보, 마케팅, 홍보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일류 대학과 비일류 대학 사이의 양극화와 서열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하에서 하버드 대학은 자산 규모를 두 배로 증가시켜 예일 대학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서보영, 2011). 교수들의 경우, 대학의 효용성 극대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교수 채용이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교수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 저임금으로 귀결되었다(임재홍, 2015).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는 대학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대학 구성원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와 대학의 민주적 소통을 제거하였다. 대학생들은 치솟는 등록금으로 빚 속에 허덕이며 공부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Mauksch, 2015). 영국 대학생의 경우, 폭등한 등록금으로 인하여 영국 대학생 20명 중 1명은 매춘을 하고 4명 중 1명은 이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임재홍, 2015). 또한 등록금이 폭등하면서 대학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이나 인종적 소수자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민주주의 사회와 공공선을 위한 대학의 고유한 역할을 무력화시켰다(Hush & Wall, 2011). 이러한 맥락에서 헨리 지루와 박현선(2015)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가 고등교육의 문화적·민주적 가치와 모순되는 것으로, 대학의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의미와 책무를 조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급속하게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서보영(2011)은 이러한 현상을 자본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글로벌’이라는 담론을 시대 화두로 구성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글로벌’ 담론은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획일화된 이념으로서 대학의 탈선을 막으며 기업형 운영이 갖는 경쟁과 효율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세계의 대학을 하나의 제도로 평가하고 통제하고자 자본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한다.

##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대학 정책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일정 부분 강화되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손석춘, 2009) 이를 박근혜 정권은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 위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 모습을 탄생시킨 대학 정책상의 가장 큰 계기는 김영삼 정권이 1995년 발표한 '5·31 교육 개혁안'이다. 이는 시장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 체제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교육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교육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경쟁, 자율, 공급자 중심, 서비스 등의 경제 용어들이 교육 분야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이윤미, 2001). 이후 김영삼 정권의 대학 정책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외국 교육 기관에 대한 대학 교육 개방, 국립대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 민영화, 학부제를 통한 대학 내 경쟁 원리의 도입,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를 통한 교수 간 경쟁 체제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었다(정진상, 2005).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교육 정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IMF로 인하여 오히려 신자유주의 성격을 더 노골화하였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꿔 승격시킨 것은 이를 시사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통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박거용, 2005). 이러한 선상에서 김대중 정권은 두뇌한국(BK21)과 특성화 대학 등 대학 교육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폈다(강내희, 2013). 또한 '국립 대학 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 대학의 민영화, 총장 직선제 폐지와 총장 공모제 도입, 교수 계약 임용제 도입, 교수 업적 평가제 개선, 교수 연봉제 도입 등 현재 대학 교육과 정책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박거용, 2005).

노무현 정권은 애초에는 교육 개혁을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난 참여와 차지,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에 부응하는 몇몇 교육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회귀'하여 5·31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김천기, 2012). 노무현 정권은 특히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립대 구조 개혁을 통해 사립대의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추동하기 위해 각 대학을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립대의 독립 법인화를 목표로 회계 제도와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 대학 간 경쟁의 틀을 만들려고도 하였다(정진상, 2005). 이러한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은 국립 대학 축소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대학을 시장 경쟁의 논리에 맡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서 대학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전 정권에서 조심스럽게 시범적으로 실행해 왔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들을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뒤집는 정책을 펴면서도 유독 교육 정책에 관한 한 역대 정권들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들은 고스란히 계승하고,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김천기, 2012). 먼저 이명박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해 오던 대학 정보 공개를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여 ‘대학 정보 공개-대학 평가-재정 지원’의 연결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박거용, 2009).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였다. 여기서 대학 평가를 취업률과 충원률 중심의 기업 경영 평가식 지표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통한 대학 평가는 결국 기존 대학 서열에 따른 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대학 운영에 기업 경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립대를 시장화하고 교수들 간에 시장주의적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들 또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정경훈, 2011). 역대 정권이라도 입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국립대 법인화를 밀어붙여 결국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을 법인화함으로써 그 물꼬를 텃다. 더욱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상호 약탈적 성과급 연봉제 도입, 총장의 대학 운영 성과 목표제 등을 국립대들의 재정을 압박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관철시켰다. 이들 정책은 국립대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에 시장 경쟁 원리를 강화시켜 국립대를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서창원, 2011).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방통행과 강압적 방식으로 실행에 옮겼다.

결국 1995년 5·31 교육 개혁안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하에 대학은 학생 운동의 거점과 학내 민주화 투쟁의 장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사회와 대학 변혁의 주체에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의 공급자와 소비자로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바뀌었다(강내희, 2013). 즉,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와 이를 반영하는 교육 정책은 대학으로 하여금 외부의 대학 평가에서 다른 대학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학 교수로 하여금 업적 평가에서 다른 교수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에 유리하도록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점과 스펙을 쌓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데에 여념이 없도록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대학과 그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대학은 더 많은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여 대학 내 노동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학은 교원 신분을 정년 트랙 전임 교원,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인 겸임 교원, 초빙 교원과 시간 강사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화·위계화하고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였으며 정규직 교원을 대상으로는 상호 약탈적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학 교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구조는 대학 교수, 지식인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임으로써 대학과 사회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봉쇄한다(이동연, 2015; 이상룡, 2015).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또한 학문 분야의 생존 여부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맡김으로써 학문과 사회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쳤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은 관료-재벌 기업-보수 언론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인문학에 대한 구조 조정이다(이동연, 2015; 이상룡, 2015). 또한 동일한 학문 분야 내에서도 성과를 용이하게 낼 수 있는 분야에 연구자나 연구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한다. 예를 들면, 언론학의 경우, 논문의 양이 교수의 채용, 승진, 정년 보장을 위한 핵심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더욱이 교수의 직업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1년에 많아야 한두 편밖에 논문을 쓸 수 없는 이론·메타이론 전공 학자는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강명구,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문 사회계에서도 1년에 논문을 20여 편 이상을 쓰는 연구자들이 나타나 스타로서 유명 대학들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편협한 세계화 담론을 배경으로 학문의 식민성을 강화시켰다. 한국의 정부, 보수 언론, (재벌) 기업, 대학 경영진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곧 글로벌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를 곧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등식화하는 담론을 유포하였다(손석춘, 2014). 국내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지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외국 기관의 대학 평가를 신봉하는 사회 분위기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학들은 전공과 학제를 불문하고 교수들이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 논문을 쓰도록 강제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국내 유명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비해 2~4배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아예 전자만을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교수의 신규 채용 시 계약서에 영어 강의를 의무적으로 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수도권 유명 대학들은 신규 교수 채용 시 아예 영어 논문 실적과 영어 강의 능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어권 외국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암묵적인 채용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학문의 식민성은 타자의 언어와 시선에 의존해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비합리성과 모순에 빠짐으로써 제대로 된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다. 대학 사회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담론 속에서 진지한 의심이나 도전 없이 정상성을 획득하고 있다(류용재, 2014).

### 3) 대학(정책)과 언론 보도

신자유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에서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학자 본인들이면서도 대학 또는 대학 정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매우 드물었다. 정준영(2010)은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신문 기사 분석에서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대학의 낭만 중 하나로 다루어지다가 1996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술 고문’으로 ‘사람 잡는’ 행사로 취급되었음을 밝힌다. 이는 보수 언론들이 진보적 대학 문화가 계승될 연결 고리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결국 대학생들은 공통 문화의 형성 기반을 상실하고 원자화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김은준(2012)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문과 다른 영역의 담론들이 개인의 자유를 기제로 하여 자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자기 계발 주체를 구현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주체로 구성되며 따라서 대학의 신자유주의 환경에 어떤 문제의식도 지니지 못한 채 순응한다고 밝힌다.

한선(2013), 이희은(2014), 이기형 외(2015)는 각각 대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대외 활동 참여, 자기 소개서 작성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한다. 한선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공모전을 통해 재미와 역능,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나 ‘열정’은 결국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명령한 ‘노동’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젊은이들이 얻게 되었다고 믿는 성장과 자아 성취가 일찌감치 ‘경제적인 것’이 되도록 강요받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작동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위의 연구들은 대학, 특히 대학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행사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권의 대학 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담론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분석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론의 담론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 신자유주의와 언론 보도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분석한 논문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 않았다(예를 들면, 강국진·김성해, 2013; 강진숙, 2006; 김성해·강희민·이진희, 2008; 김수미, 2015; 방희경·유수미, 2015; 손석춘, 2009; 양은경, 2010, 2012; 유용민·김성해, 2007, 이선민·이상길, 2015).<sup>2)</sup> 이러한 현상을 대학의 신자유주의

2) 미디어 정책, 텔레비전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뉴미디어를 둘러싼 문화 등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로

문화와 연관이 있음을 오래전에 일갈한 손석춘(2009)의 아픈 지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좀 더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용민과 김성해(2007)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노동 운동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적 슬로건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은 채 노동계와 노동 운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면서 친자본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따라서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적 참고 문헌과 태도의 생산·유통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반면, <한겨레>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프레임을 기반으로 노동 운동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겨레> 또한 지배 담론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 운동과 노조의 권익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변하는 담론 생산자로 기능하지 못했다. 더욱이 외환 위기 이후 <한겨레>에서 노동 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점차 증가하고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핵심 가치와 점차 동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손석춘(2009)은 주요 신문들의 경제 담론 분석을 행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극히 기피되고 있으며 언급될 경우에는 일방적 찬사이거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게 절대 다수였다.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이 다른 신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절대적으로는 미미하여 신자유주의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에 소홀했다. 결국 신자유주의 담론으로 무장한 언론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일상적으로 해석하고 여론화해 나가고 있었다.

강국진과 김성해(2013)는 주요 신문들의 재정 건전성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 언론들은 감세·긴축 프레임을, <경향신문>·<한겨레> 등 소위 진보 언론들은 증세·복지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완벽하게 양분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양쪽을 오가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언론의 담론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몇몇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먼저 한국의 언론 보도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담론을 생산·유포하는 데에 적극적인 언론들이 한국 언

---

대상을 넓히면 더 많은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다루지 않았다.

론계를 압도하고 있다. 의견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신문 시장은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신문들이 급성장해 왔는데, 이들 모두가 신자유주의 담론을 매우 적극적으로 생산·유포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권에 종속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KBS, MBC, YTN 등의 공영 방송들과 함께 보수 신문이나 경제 신문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들 또한 신자유주의 담론을 생산·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대항 담론을 생산·유포한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 진보·개혁 성향의 언론들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발행 부수에서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으며 경제 신문들의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이들은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의 생산·유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생산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들이 제공하는 또 다른 통찰력은 한국의 언론 보도가 압도적으로 신자유주의 담론을 생산·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라는 단어의 사용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큰 저항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시민들의 일상과 인식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 의해 생산·유포되는 ‘대학 개혁’ 담론 또한 은폐 전략하에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3. 연구 방법

#### 1)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영국과 호주의 선구적인 비판언어학자들과 담론 분석가인 페어클러프(Fairclough) 및 텍스트 언어학자인 반다이크(van dike)의 접근법 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을 의미한다(이정민·이상기, 2014).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서로를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사회적 권력 관계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Fairclough, 2010).

비판적 담론 분석의 대표적 분석틀은 페어클러프(1992)가 제시한 ‘텍스트(text)’ 분석,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분석, ‘사회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 분석 등 세 가지 층위에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은 분리하기 어렵기에 이 두 층위의 분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은 '어휘(vocabulary)', '문법(grammar)', '결속성(cohesion)', '텍스트 구조(text structure)'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Fairclough, 1992). 이 중에서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휘 분석으로 이는 특정 현상을 지시하는 데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 투사를 테러리스트로 칭하거나 그 역의 상황과 같은 '재어휘화(rewording)'와 함께, A를 익숙한 B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방식, 지식과 신념 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조화하는 '은유(metaphor)' 등의 개념들이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기존 연구들도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어휘 분석을 행하였다. 신진욱(2011)은 현실의 특정한 측면 혹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분류 도식을 응축하는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강한 강인 효과가 있고 반복된 언술을 자연스럽게 진실로 믿게끔 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낳는 '자주 쓰기(overwording)'와 부정적인 화용론적 효과를 막기 위해 더 관습적이고 친숙한 단어로 대체하여 권력 집단의 실제적 이해 관심을 은폐하고 담론의 청자(독자)가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 '완곡어법(euphemism)'<sup>3)</sup>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행하였다. 이선민과 이상길(2015)은 대상이 지닌 여러 속성들 가운데 일부를 강조함으로써 그 대상을 정의하고 특수한 틀 안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 '범주화(categorization)'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여러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과장해 묘사하는 '과어휘화(overlexicalization)' 등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분석은 텍스트들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되는 과정의 본질을 탐색한다. 분석을 위해 페어클러프(1992)는 발화의 영향력(force of utterances), 텍스트의 일관성(coherence of texts),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s)라는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한다. 특히 페어클러프는 담론적 실천을 상호 텍스트성(또는 상호 담론성)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에 치중한다. 상호 텍스트성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특정 텍스트 내에 다른 텍스트의 요소들이 현존하는 것을 뜻한다. 즉, 텍스트 간에는 상호 참조와 상호 침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신진식, 2011). 이는 특정 텍스트들이 이전 텍스트들을 변형시키고, 현존 관습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텍스트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특정

3) 예를 들면, 정신병동에서 병동 환자들이 '유폐'라고 표현하는 상황을 의료 기관에서는 '격리'라고 명명하며, '탈출'을 '실종'으로, '감금 병동'을 '출입 제한 병동'으로 표현하는 제도화된 언어 관행을 발견해 낸다(Fairclough, 2001: 신진욱, 2011 재인용).

한 언어적 요소들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페어클러프는 상호 텍스트성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제(presupposition), 부정(negation), 메타담론(metadiscourse), 아이러니(irony) 등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전제가 분석에 자주 이용된다. 전제는 어떤 명백한 상호 텍스트적 단서 없이 독자의 과거의 축적된 텍스트 경험에 의해 텍스트의 담론을 당연한 것 또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 구조, 사회 권력 또는 사회적 투쟁 등의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어클러프(1992)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전용한다. 페어클러프에게 언어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담론적 실천은 대부분의 경우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재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의미 작용들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적 성질을 지닌다. 담론적 실천이 함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자연화되어서 상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지배 관계의 형성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담론적 실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경쟁, 투쟁, 변형, 재형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담론적 실천은 각종 이데올로기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접합(articulation), 탈접합(disarticulation), 혹은 재접합(rearticulation)함으로써 '상식'을 구성하는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 속에 있다. 결국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 핵심은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현존하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서덕희, 2003).

그러나 비판적 담론 분석은 공통된 방법적 규칙이나 기술, 원리를 뜻하지는 않으며(김영기·한선, 2011), '담론 분석을 통한 사회 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느슨한 공통의 관심과 지향을 공유하는 접근 혹은 학파(신진욱, 2011)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는 방법론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통일된 절차와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간학제적·비판적 기여를 위해 필요한 분석 방법을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론적 이슈가 된다(김선기,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페어클러프(1992)가 제시한 담론 분석의 틀과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도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전용하고 기존에 행해진 연구들의 다양한 분석 틀과 개념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의도에 맞게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미리 고정된 분석 틀과 개념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자료를 분석하기보다는 분석 틀·개념과 분석 자료를 오가며 양자를 계속해서 수정·보완하는 순환적 방식으로 분석 틀 및 개념을 좀 더 정교화·다양화하여 이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자료를 좀 더 많이 포함한 채 결과를 도출하고 좀 더 심층적인 결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해석적/인지적 틀을 생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을 형성하고자 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 중 보수·보수를 대표한다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개혁·진보를 대표한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4개 종합 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시기는 역대 정권 중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정책을 가장 강도 높게 펴고 이에 따라 대학 개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정권의 시작부터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 정권의 전반기까지인 2008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약 8년간이다. 분석 대상 기사 유형은 사설과 내부 칼럼에 국한하였다. 이는 사설과 내부 칼럼이 개별 신문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행위로서 신문사의 이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 담론으로 표출되기에(이정민·이상기, 2014)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사 유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은 <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로는 '대학 개혁', '대학 구조 조정', '국립대 선진화 방안', '성과 연봉제', '총장 직선제', '총장 대학 운영 성과 목표제', '대학 정보 공개', '대학 평가', '교수 연구 업적' 등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학 정책이나 그것과 연관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후 기사의 주요 내용이 대학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경향신문> 26건, <동아일보> 59건, <조선일보> 64건, <한겨레> 18건이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연구 결과의 분석이나 해석 시에 참고하기 위해 외부 칼럼과 기획/연재 기사들도 함께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자료 정리하기와 친숙해지기, 범주(category)·주제(theme)·유형(pattern) 만들기, 자료 코딩하기, 자료에 대한 초기의 이해·해석 점검하기, 대안적 해석과 설명 찾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 6단계의 질적 분석 절차(Marshall & Rossman, 1999)에 따라 수행되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세 가지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해석되었다. 이 핵심 주제들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

였다. 연구 결과의 첫 번째 부분부터 세 번째 부분까지는 대학 개혁 담론을 주도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중심으로, 네 번째 부분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기사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한 이유는 통상 행해지는 도출된 주제에 대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담론과 <경향신문>·<한겨레>의 담론을 비교 제시하는 방식보다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과 논지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가 함유하고 있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불평등한 담론 지형을 좀 더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대학 위기 기정사실화와 국가 위기로 확대하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국가 위기로 확대 해석하여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담론을 생산하여 사회에 유포함으로써 이를 상식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신문들의 보도는 대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 근거 그리고 사례들을 제시하지만, 정작 대학이 직접적으로 왜,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학의 위기는 제시된 많은 문제와 대안들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대학이 처한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와 졸업자 취업을 저하인데, 이 문제는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지 대학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결국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제시하는 대학 위기의 근거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개혁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또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실 이 신문들의 보도에서 대학은 위기에 봉착했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대학을 특정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대학은 당연히 위기에 처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sup>4)</sup>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논리 역전 또는 논리 모순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독자들이 대학 위기를 당연한 현실, 즉

4)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 속에 있다고 하겠다. <자백>이라는 최근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보여 주듯이, 국정원은 간첩이 있기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간첩을 만들어 낸다.



상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담론 전략들을 사용한다.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거의 모든 보도는 대학 또는 교수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하적인 어휘들을 구사한다. 대학을 '부실 쓰레기 더미', '장사꾼', '약장사', '잡화점' '고학력 실업자 양성소', '불법 입국 브로커' 등에 비유하며, 대학이나 교수들을 '허깨비', '영터리', '깡통', '유명무실한', '한심한', '먼지 쌓인', '뿌리부터 썩어 가는', '배울 것 없는', '존경할 것 없는', '젓밥에만 눈이 어두운', '싸움으로 날이 새는' 등으로 수식한다. 또한 대학이나 교수들의 행위를 '(자리를) 나눠 먹는다', '펼쩍 뛰다', '(발목을) 잡는다', '(손발을) 묶어 놓는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흔들어 댄다', '(학생들을) 토해 낸다', '(학점을) 부풀리다' '(배 짜라 식으로) 버티다', '(연봉을) 챙긴다', '(비싼 등록금만) 들이켜다', '(학부모와 학생을 고통 속에) 밀어 넣는다' 등의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속박을 행하는 동사들로 표현한다. 이러한 대학과 교수에 대한 끊임없는 비하적인 어휘의 사용은 대학을 더는 사회가 존중해 줄 가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격받아 마땅한 문제투성이의 영역으로 격하시킨다. 이러한 어휘들은 대학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위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어휘화와 은유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의 문제를 국가(경제)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연결하고 확대시킨다.

미국의 1개 대학이 창출하는 엄청난 지적 자산과 국부(國富)를 보며 우리 대학들의 미래,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2011, 5, 20, 사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대학이 배출하는 인간 자원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뜻이다. 그런 뜻에서 KAIST 개혁은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미래의 시험대다. (조선일보, 2008, 3, 4, 사설)

이 신문들의 보도는 대학과 국가, 그리고 국민의 운명이 함께 결정되고 따라서 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고 결국 전체 국민에게 중대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상식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 위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IMF 이후 경제 위기가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위기는 경험에 의한 사고 구조, 그리고 행위 구조에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국가 위기로 전이시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는 경제적 불안감 속에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잘 부

합함으로써 설득력과 현실성을 지닐 수 있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자료나 인물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용한다. 먼저 이 신문들의 많은 보도들은 다양한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를 제시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은 서울대(50위)와 KAIST(95위) 둘뿐이다. (동아일보, 2009, 5, 8, 사설)

서울대는 국제적인 대학 평가들에서 기껏해야 50위권, 낮게는 20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조선일보, 2008, 8, 15, 사설)

이러한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는 한국 대학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 통계 조사는 양적 수치를 나열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장 전형적인 근대 과학적 지식의 재현 방식이다(서덕희, 2003).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통계 조사 결과는 사회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국내 대학 평가도 대학 이미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김성해·강희민·이진희, 2007; 오대영, 2015),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서구의 평가 결과인 세계 대학 순위는 더욱더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이나 스포츠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순위에 집착하는 문화를 지닌 한국 사회에서 세계 대학 평가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순위 문화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대학 순위에 대한 논쟁은 빈발하고 순위가 낮은 대학에 대한 폄훼가 크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세계 대학 평가들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세계 대학 평가라는 통계 결과를 대학 정책 관련 기사 대부분에서 제시함으로써 한국 대학이 무능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현실로서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를 진단하고 비판할 때 많은 기사에서 외국의 유명 대학, 특히 미국의 유명 대학과 비교하고 빈번히 미국 유명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을 제시한다. 기사들은 인용한 대학 관계자들이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를 강조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에이미 거트먼 총장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적절한 지적을 했다. … 거트먼 총장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프린스턴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으로 선임된 여성이다. (동아일보, 2011, 6, 14, 사설)

“서울대 인문대와 교수들은 시대 변화를 호흡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서울대 인문대 ‘조직 진단’을 해 온 김성복 뉴욕주립대 석좌 교수가 8일 결과를 내놓으며 한 말이다. … 서울대 인문대는 올해 초 뉴욕주립대 부총장을 지냈고 미국 내 대학 평가 경험이 풍부한 김 교수에게 국제 기준에 따른 진단을 의뢰했다. (조선일보, 2008, 5, 9, 사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유명 대학의 상황, 또는 그 관계자들의 주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위기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교육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어떤 성향이나 교육 철학을 지닌 사람들인지에 대한 고려나 의문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넷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는 문제들도 대학의 문제와 책임으로 전가시킨다. 위의 논의들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논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대학이 위기에 처한 직접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보도에서 대학의 위기는 이미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보도들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의 감소와 대학 졸업생 취업률 저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56.1%밖에 안 된다.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1년에 1000만 원을 넘나드는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꺾일 지경인 부모 입장에서 대학은 자녀들 취직에 보탬도 주지 못하면서 ‘돈만 빨아먹는 기계’로 비칠 뿐이다. (조선일보, 2008, 12, 29, 사설)

1990년대 초부터 학령(學齡) 인구 급감을 겪은 일본 가나자와(金澤) 공대는 재학생이 수천 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 대학이지만 ‘도쿄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2015, 9, 1, 사설)

위의 기사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취업률 문제를 대학의 문제로 치환하여 대학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위기는 강력한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 정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사회적 문제다. 이것은 대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김영삼 정권의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을 통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취업률의 문제 또한 대학의 책무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무다. 기업과 사회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면 대학 전체 취업률은 올라갈 수 없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제로섬 게임만이 존재할 수 있다. 대학의 서열 체계가 명백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로섬 게임의 결과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취업률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에 지역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학령 인구의 감소와 취업률의 저하를 대학의 문제와 책임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 2)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 낙인찍기

대학 위기의 기정사실화와 국가 위기로의 확대 해석의 담론은 그것의 진위를 충분히 생각하고 파악하기도 전에 독자들로 하여금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용의자를 상기시키는 의미 작용을 한다. 즉,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낸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의구심과 적개심을 품도록 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의구심과 적개심이 타당한 것임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준다. 일단 대학 위기를 불러온 용의자로 교수들을 제시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대학 개혁의 선두주자 몇몇을 제외한 교수들 대부분은 대학을 위기로 몰아넣은 확실한 용의자들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연구에서 무능하고 나태한 반면, 자신들의 이익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 교수들을 착취하고 논문 조작과 표절, 연구비 불법 사용 등을 일삼으며 성폭행을 빈번히 저지른다. 또한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고집스럽고 폐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수들의 문제는 거의 모든 보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지목하고자 하는 대학 위기를 불러온 실질적 용의자는 교수들이 아니다. 교수들은 1차적 용의자로서 독자들을 실질적 용의자에게 인도하고 실질적 용의자를 공격하기 위한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신문들의 보도가 지목하고자 하는 실질적 용의자는 기존 대학 체계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대학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결국 기존 대학 체계가 교수들의 무능과 타락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도들은 기존 대학 체계, 예를 들면 느슨한 대학의 승진·정년 보장 기준, 호봉제, 총장 직선제, 학과 중심의 대학 체계, 국립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각각 문제를 지니고 있더라도 기존 대학 체계들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제시한 대학 위기의 징후와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면, 기존 대학 체계들은 이 신문들의 보도가 그나마 대학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졸업생 취업률의 저하와는 직접적이거나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들은 다양한 담론 전략을 사용하여 기존 대학 체계가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실질적 장본인이며 따라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담론을 상식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들 대부분은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단정, 과장, 그리고 과도한 추측, 해석과 일반화 등을 행한다. 그럼에도 기존 대학 체계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용의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깊게 각인시킨다.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페어클러프가 제시한 상호 텍스트성이 작동하는 방식 중 전제를 사용한다. 즉, 보도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가 제시되지 않지만 이 불충분함에 의해 생기는 간격을 독자들이 이전에 다른 기사들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이해로 메우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던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동아일보, 2010, 12, 10, 사설)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많은 대학이 총장 직선제로 포퓰리즘의 포로가 돼 있다. (동아일보, 2011, 5, 20, 사설)

교수들이 연구보다 선거에 몰두해 “대학이 선거판이 됐다”는 탄식도 쏟아졌다. (조선일보, 2015, 10, 12, 사설)

위의 인용문들에서 어떤 설명이나 논리 없이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은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로, “총장 직선제”는 “학생 수의 급감”의 원인으로 단정되어 있고, “교수들이 연

구보다 선거에 몰두해”는 과도한 추측과 일반화의 결과다. 그럼에도 이전에 유사한 맥락의 보도나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은 이 기사의 주장들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것 또는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다시 각인할 수 있다.

독자들의 이미 축적된 텍스트 경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주로 작은 따옴표 형식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는 농담이나 관용어 등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보도가 별다른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도 기존 경험과 이해를 소환하여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기존 대학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시 각인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받는다.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다 둔재로 만드는 곳이 한국 대학’이라는 혹평까지 나오는 판이다.  
(동아일보, 2014, 8, 14, 사설)

교수사회 ‘고인 물’ 빠라. (조선일보, 2008, 3, 6, 사설)

고교 교무실에 ‘대학 교수와 잡상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곳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조선일보, 2008, 12, 29, 사설)

비슷한 맥락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은유를 사용한다. 즉, 두 신문 의 보도는 기존 대학 체계들을 사회에서 통상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별다른 설명이나 논리를 제공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기존 대학 체계들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한다.

사립대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으면서도 국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내면서 교과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철밥통 사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동아일보, 2011, 5, 30, 사설)

서울대 공대가 백서에서 밝힌 자기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 적당히 자리 지키면서 서울대 명함을 들고 외부 활동에 바쁜 교수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현실 안주, 온정주의, 철밥통 지키기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조선일보, 2015, 7, 14, 사설)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 연봉제는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과 다를 게 없다. (동아일보, 2010, 2, 22, 사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은유는 '대학 또는 교수직 = 철밥통'이다. 이는 다른 텍스트들의 경험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기존 대학 체계나 교수직의 무사안일, 폐쇄성 및 이기적 특권 의식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학의 승진·정년 보장 기준이나 호봉제 급여 체계 등은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문제시되고 깨뜨려야 할 대상이 된다. 특히 국립 대학은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국립 대학 교수들은 신분이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 철밥통'이라는 은유가 중첩되어 '국립 대학 또는 국립 대학 교수직'은 '최고의 철밥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은유를 통해 국립대 체계 자체도 자연스럽게 문제화되고 깨뜨려야 할 대상이 된다. 위의 인용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 철밥통 사수'의 은유는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에서 '국립대 교수 = 전교조 교사'라는 은유의 사용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 체계를 자연스럽게 국립대 교수에게도 적용하여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 세 가지 방식들은 각기 독립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반복·중첩되어 사용됨으로써 기존 대학 체계를 용이하게 악마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러한 방식들은 기존 대학 체계가 대학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으로, 따라서 대학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적 원인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범주화와 재맥락화의 담론 전략을 사용한다. 먼저 두 신문의 보도는 기존 대학 체계들이 지닌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정한 부정적 측면만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대학 체계들을 정의하고 특수한 틀 안에서만 바라보도록 하는 기존 대학 체계에 대한 범주화를 구축한다. 또한 이러한 범주화를 기반으로 기존 대학 체계들을 민주화와 공공성 등의 근대적 의미 체계에서 분리하는 탈맥락화와 봉건성·후진성 등의 전근대적인 의미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재맥락화를 수행한다. 총장 직선제에 대한 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선심성 공약 경쟁은 총장 직선제의 폐해이기도 하다. 유권자인 교수와 교직원들이 개혁보다는 안주, 먼 장래보다는 당장의 처우 개선에 솔깃해하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은 학과 구조 조정이나 교수 평가 강화, 평가와 급여의 연계 같은 개혁을 말할 엄두를 못 낸다.

파벌 싸움과 자기 사람 챙겨 주기로 인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동아일보, 2010, 4, 26, 사설)

직선 총장은 새로운 학문 동향에 부응하기 위한 기존 학과 통합도 추진하지 못하고 사회적 수요가 사라진 학과를 없애지도 못하고 교육·연구 성과급 같은 개혁 정책도 펼 수가 없다. 유권자인 교수·교직원의 신분과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 4년마다 선거철이 되면 캠퍼스는 파벌 짓기·표(票) 매수·비방의 진흙탕에 빠진다. (조선일보, 2011, 9, 22, 사설)

위의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총장 직선제를 보도할 때마다 향응, 매수, 파벌 싸움, 패거리주의, 정치판, 순혈주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논공 행상 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독자들은 부작용의 틀 안에서만 총장 직선제를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타락의 극치 대학 총장 선거판 견어치워야'라는 사설 제목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수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총장 직선제는 더는 대학의 민주화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타락한 전근대적인 체계로 변질된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 된다.

1988년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 사회에 총장 직선제가 유행처럼 도입됐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행정의 투명화, 자율성 강화를 가져온 장점도 없지 않으나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폐단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분위기에 편승해 직선제를 도입했던 다수 사립대는 갖가지 폐해를 경험한 뒤 직선제를 폐지했다. (동아일보, 2011, 9, 26, 사설)

1987년 민주화 열풍을 업고 등장한 총장 직선제는 많은 폐해가 드러나 대다수 사립대들이 이 제도를 버렸지만 국립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 국립대들은 국민 세금으로 갖은 특혜와 지원을 받고도 세계에 내놓을 번듯한 대학 하나 배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1, 9, 22, 사설)

결국 총장 직선제는 대학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상식화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같은 논리와 과정을 거쳐 호봉제 급여 체계와 국공립 대학 체계 등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구축한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현장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



식하도록 하는 인용 형식을 사용한다. 먼저 익명으로 마치 관련 사안의 당사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고백하는 인용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현실감을 제공한다.

“사립대보다 우월하다는 국립대의 뿌리 깊은 특권 의식 때문일 겁니다.” 최근 법인화를 놓고 국립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마찰에 대해 기자가 만난 한 사립대 총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 2011, 5, 30, 사설)

1970~80년대 시대 상황의 엄혹함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서울대교수협의 활동은 ‘민주화 투쟁’보다는 ‘교수 이익 대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교수들은 “교수협은 1960년대 출범 당시부터 ‘교수 친목 기구’였다”, “1970~80년대는 교수협이 민주화 전면에 나설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2014, 7, 11, 사설)

위 인용들은 출처가 없어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 형식은 인용 내용들을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보도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 특히 기존 대학 체제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많은 기사들은 그 객관적 증거로서 이미 앞에서 논의했던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를 제시한다. 즉 현 대학의 승진·정년 보장 체제, 호봉제, 총장 직선제, 국립대 제도 등은 세계 대학 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국가를 위기에 이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제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데에 세계 대학 평가는 절대적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척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도에서 제기한 대학 체제나 사 건들의 전후 맥락, 또는 이들의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설명이나 의 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국립대 법인화에 착수했으나 2004년 법인화를 완료해 벌써 가 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상하이 자오퉁(交通)대가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도쿄 대는 19위, 교토대는 23위에 올랐으나 서울대는 지난해와 같은 152~200위권에 머물렀

다. (동아일보, 2008, 8, 25, 사설)

중앙대는 2009년부터 교수 연구·강의 실적을 S·A·B·C 4등급으로 평가해 연봉에 반영해 왔다. 그런데도 일부 정년 보장 교수가 해마다 저(低)평가를 받자 이변에 연구실 배정 취소, 대학원 강의 금지라는 충격 요법을 내놓았다. ... 그 결과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129위(2010년) → 93위(2011년) → 82위(2012년) → 71위(2013년)로 매년 순위가 뛰어올랐다. (조선일보, 2013, 9, 17, 사설)

### 3)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을 상식화·자연화하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국가 위기로 확대하여 매우 위급한 문제로 인식시키며 그 원인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여 이를 하루 빨리 바꾸어야 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여 유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위급한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궁급증을 이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에 대한 답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교수 승진 기준의 상향과 종신 교수제 폐지 등을 통한 경쟁의 강화, 성과급 연봉제 도입, 국립대 법인화, 교육부 평가 중심의 대학 구조 조정 등 주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들 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들을 제시한다. 사실 대학 위기의 진단이나 기존 대학 체계의 비판은 이미 신자유주의 틀을 통한 것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기존 대학 체계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기준에서 문제이고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도는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여러 담론 전략들을 구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의 상식화와 자연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시한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들 또한 기존 대학 체제들을 대신해야 마땅한 것으로 상식화되고 자연화된다고 하겠다.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어휘화와 은유를 사용하여 경제 담론과 교육 담론을 접합시킴으로써 경제 담론의 교육 영역으로의 침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거의 모든 보도에서 대학 경쟁력, 교육 경쟁력, 학과 경쟁력, 교수 경쟁력 등의 어휘들을 빈번히 사용한다.

교수 성과 연봉제는 ... 대학 경쟁력을 동반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동아일보, 2010, 2, 22, 사설)

경쟁력 없는 잡화점식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생이 나올 리 없다. (동아일보, 2014, 3, 4, 사설)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교수 경쟁력이다. (조선일보, 2008, 8, 15)

이 어휘는 교육 분야와 경제 분야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다. 이 어휘들은 이제 상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는 현실의 특정한 측면 혹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분류 도식을 응축하는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강한 각인 효과가 있고 반복된 언술을 자연스럽게 진실로 믿게끔 하는 과어휘화의 이데올로기 효과로서, 경제 영역과 교육 영역의 접합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경쟁력 = 국가 경쟁력'이라는 은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대학이 이끈다.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 관련 지표는 57개국 중 50위권이었다. 4년 만에 대학 경쟁력을 163계단이나 올려놓은 서 총장을 연임시키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총장을, 무엇을 보고 뽑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2010, 6, 26, 사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대학이 배출하는 인간 자원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08, 3, 4, 사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가 경쟁력은 전통적인 내셔널리즘적 신자유주의 담론이 강조하는 것으로, 이 은유 속에서 대학은 경제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동학 내에서 시장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재단어화와 완곡어법을 통하여서도 경제 담론과 교육 담론을 접합시킨다. 먼저 이들의 보도는 대학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 품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취업률 부풀리기 같은 허위 정보는 소비자에게서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범죄 행위이다. (동아일보, 2008, 12, 31,

칼럼 <기자의 눈>

비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학생과 기업,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다. 청년드림 대학 평가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청년들의 꿈을 키워 주는 대학이 일자리 강국의 필요조건이다. (동아일보, 2013, 5, 22, 사설)

수용자 중심 교육은 원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열린 교육 정책을 재단어화한 것이며, 여기서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주체인 ‘소비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서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아니라 기업이다. 학생은 대학 교육의 1차 소비자이지만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상품이 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상품(학생)을 만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sup>5)</sup> 이 담론 전략이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는 것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IMF 이후 오랫동안의 경기 불황과 높은 실업률의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 영역에 시장 논리를 받아들이면 사회에서 살아남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동아일보> 나 <조선일보> 의 보도가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현장형 대학’은 ‘기업 맞춤형 대학’의 완곡어법이다. 특히 대학 위기의 징후로 취업률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교육 담론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담론을 강력하게 접합시킨다.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에 오르기 위해 많은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연구 쪽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강의와 수업 등 교육적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은 대졸 신입 사원을 뽑아도 당장 쓸모가 없다며 대학 교육의 품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동아일보, 2012, 5, 17, 사설)

쓸 만한 대학 졸업자가 드물다는 기업의 구인난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눈만 높아진 학생들을 사회로 토해 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조선일보, 2011, 3, 20, 사설)

5) 동일한 맥락에서 신진욱과 이영민(2009)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에서 수요자 담론이 ‘기업의 수요’와 ‘사회의 수요’를 동일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 ‘좋은 교육’을 동일시하며,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는 교육자, 직접적 소비자는 학생이지만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는 기업으로 상정하면서, 행위자들 자신이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학생)을 생산하지 않는 대학들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하마 물켜듯 등록금을 빨아먹는', '고학력 실업자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또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졸업장 장사로 배속을 채우는' 곳이 된다. 경제 담론과 교육 담론의 접합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계적으로 전개되어 대학은 이제 기업이 주문하는 상품(학생)을 조달하는 하청 공장으로 간주되는 담론 양상을 보인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성이 드러나지 않고 보도가 현실적 또는 객관적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촉진하는 좀 더 직접적인 담론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기존 대학 체계의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에서 신자유주의의 반(反)관료주의와 공공 부문의 범죄화 담론을 배경으로 삼는다. 신진욱과 이영민(2009)은 이명박 정권이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행할 때 정책 담론으로는 기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기업 효율성 담론'과 함께, 공공 기관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반관료주의 담론'과 부패·경영 방만·인사 비리 등의 문제를 강조하는 '공공 부문의 범죄화' 담론을 결합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공직' 기관이기 때문에 범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민간 기업은 '사적'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명암 대비 구조를 생성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 기관 대(對) 기업·국민'이라는 대립 관계를 설정하여 기업·국가·국민의 이익을 동일시하고 시장 경쟁 기제의 공공선 창출 효과를 자명하게 전제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또한 기존 대학 체계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교수들의 개인적 일탈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대학을 방만·부패·비리가 횡행하는 곳으로 재현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수·기존 대학 체계 대 국가·국민·정부·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라는 대립 관계가 설정된다.<sup>6)</sup> 그리고 국가·국민·정부·신자유주의 대학 체계의 이익은 동일시되고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와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들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성과 객관성을 지닌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를 많은 기사에서 인용하는데, 기존 대학 체계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세계 대학 평가의 결과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 객관성을 지닌 것

6) 이 대립 관계는 뒤에 이항적 대립 구조에서 구체적 사례와 설명을 제시하겠다.

으로 인식되기에 이 신문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떤 평가이든 근본적으로 지향성을 지닌다. 즉 어떤 평가든 특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정한 기준은 결국 특정한 시각을 토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행하는 세계 대학 평가(QS)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대학 평가들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세계 대학 평가들의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를 엿보게 한다.

대학 순위 평가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유에스뉴스는 1999년 하버드·스탠퍼드를 제치고 98년 9위였던 칼텍을 1위에 올렸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주면서 학생 900명에 불과한 칼텍이 덕을 본 것이다. 논란이 일자 유에스뉴스는 이듬해 가중치를 조정해 칼텍을 4위로 밀어냈다. 작년 6월 유럽 47개국 850개 대학 총장 모임(EUA)은 대학 순위 평가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순위 평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학도 있다. (조선일보, 2012, 5, 29, 칼럼 <만물상>)

특히 대부분의 세계 대학 평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신문사에서 행해지고 그 주요 평가 기준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합한다. 즉, 세계 대학 평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만이 평가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적은 독일과 프랑스의 대학들은 순위에 없는 것은 이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을 제외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학들은 50위 이내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운영 재원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이고 평준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의 자구(自救) 노력과 변화 의지가 약해 대학 경쟁력이 국가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극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 대학은 교육의 평등권과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동아일보, 2011, 6, 14, 사설)

위의 기사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의 상위 순위에 들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기준에 벗어난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조하

는 대학 교육 철학의 결과다. 이는 기사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 대학 평가가 신자유주의 편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에서 교육·학문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주도하고 정당화하는 담론들이 업적 점수 체제와 표준화된 평가·관리 체제 도입을 정당화한다는 보다크의 분석(Wodak, 2009: 신진욱, 2011 재인용)은 세계 대학 평가의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외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 아니라 객관성이나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은폐·백신 전략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이 신문들의 보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어휘는 은폐되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이 신문들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들의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논리들을 시인하는 듯이 가볍게 언급함으로써 보도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반론을 행함으로써 더는 그 문제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들을 미리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이 '피할 수 없는 추세',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세계적 추세',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을 불가피한 것으로 자연화하기도 한다. 때로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 보도를 이념적인 논쟁으로 규정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보도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적 과제를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에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도전 정신을 잃고 특권에 안주해 온 국내 대학 풍토에서는 중앙대 같은 곳이 더 늘어나야 한다. (동아일보, 2014, 8, 14, 사설)

성과급제 반대 교수들은 이 제도가 "교수들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평가는 사(私)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3, 5, 13, 사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이 문제가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편 가르기 식 흑백 공방의 늪에 빠질 뿐, 진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동아일보, 2011, 4, 14, 칼럼 <오늘과 내일>)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독자들을 신자유주의 주체로 구성하여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 전략을 취한다. 먼저, 앞에서 논의했듯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경쟁력 = 국가 경쟁력’이라는 은유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이를 각인 시킴으로써 대학 위기가 국가 위기이고 따라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 과정은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국민, 우리로서 호명하면서 신자유주의 주체 위치를 강요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타락의 극치인 대학 총장 선거판을 방지할 것인가. 이리고도 세계적인 대학을 기대하긴 어렵다. (동아일보, 2011, 9, 26, 사설)

KAIST 개혁은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미래의 시험대다. (조선일보, 2008, 3, 4, 사설)

평준화는커녕 가혹하리만큼 서열화돼 있는 게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이다. 이런 것을 두고 대학 평준화의 모범 사례인 양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2, 7, 16, 칼럼 <태평로>)

더 나아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나(우리) : 너(그들)’의 이항 대립 구조를 사용하여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주체로 호명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보도에서 ‘나(우리) : 너(그들)’의 이항 대립 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가·국민·정부·신자유주의 대학 체계 대 대학·교수·기존 대학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본 구조 아래에 보도에서 자주 제시된 이항 대립 구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나타나는 이항 대립 구조의 기본적 틀 중 하나는 ‘피해자 : 가해자’다. 학생·학부모·국민·국가는 선량한 피해자로, 대학·교수·기존 대학 체계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가해자로 구조화된다.

서 총장은 어제 언론인들과 가진 토론에서 “지난해 테뉴어 심사에서 교수들을 다수 탈락시킬 당시 KAIST 내부의 저항은 반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탈락한 교수들은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그는 “그렇다면 잘못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희생시



표 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이항 대립 구조

나(우리)	너(그들)
국가, 국민, 정부,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	대학, 교수, 기존 대학 체계
피해자, 뼈빠지게 고생하는	가해자, 무위도식하는
이성적, 합리적, 효율적	비이성적(감각적, 동물적),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능력 있는, 가능성 있는	무능한, 가능성 없는
성실한, 노력하는	나태한, 게으른
건실한	부패한
현실을 깊게 이해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전근대적
다양한, 개방적	획일적, 폐쇄적
민주주의, 자유	권위주의, 위계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속물적인

켜도 좋으나'며 굽히지 않았다. (동아일보, 2008, 11, 7, 사설)

총장 직선제는 무엇보다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았다. 총장들이 교직원 임금 인상, 강의 시간 단축 같은 무리한 공약을 지키느라 등록금을 해마다 대폭 올린 것이다. (조선일보, 2015, 10, 12, 사설)

이는 대학(구성원)과 국민을 대립적 관점으로 상호 분리시키는 담론 전략으로, 대학(구성원)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국민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호명하면서 그러한 국민 안에 대학 구성원의 부재를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권, 특히 야당 또한 너(그들)로 국민에서 제외되며 고립된다. 정부 또는 교육부는 국가 전체의 문제인 기존 대학 체계와 투쟁을 벌이는 개혁 주체로서 위상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조는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 또는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신속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들 또한 너(그들)의 위치로 전환된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나 대학 구조 조정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립대 : 국립대의 대립적 구조를 사용하여 국립대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대다수 사립대는 교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했다. 사립대 학생

들은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고통을 받는다. 국립대가 그동안 정부 지원 속에 안정된 직장, 낮은 등록금이라는 안락을 누린 것도 사립대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 2011, 5, 30, 칼럼 <기자의 눈>)

이러한 이항 대립 구조 속에서 주체 위치를 강요당함으로써 독자들은 대학 체계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한 대학 개혁인지 등의 문제는 배제되고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쉬운 상황 속에 놓인다. 주체 위치에 있는 것은 상식화·자연화되고 그 반대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만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독자들은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자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 주체로서 구성될 수 있고 친기업, 시장화 등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토대로 한 대학 체계를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 4) 반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 생산의 소극성과 한계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대학개혁에 대한 보도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의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는 현재 대학이나 교수 사회가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이러한 문제들을 대학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와 관련짓지 않는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이 신문들의 보도에서 대학의 위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들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에서 대학 개혁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화와 합의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기사에서와는 달리 대학 구성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된다.

KAIST가 앞장선 최근의 교수 사회 개혁 바람은 많이 늦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이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가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어서다. ...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교수들도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 2008, 3, 11, 칼럼 <경향의 눈>)

대학이라고 경쟁과 동떨어진 채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경쟁 시스템이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었느냐 여부다. 서남표식 개혁은 이 동의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한겨레, 2011, 4, 29, 사설)

둘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는 대학의 시장화와 기업화 흐름,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촉진시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개혁의 기수로 영웅화되는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과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경영 방식을 비판한다.

학교는 거대한 취업 학원 내지 기업 연수원으로 전락하고 학생은 알바와 스펙 쌓기에 허덕이며 교수는 업적과 프로젝트 성과에 쫓기고 있다.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은 아스푸레하고 진리 탐구라는 말도 아득한 옛말처럼 들린다. 대학의 시장화가 만든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오히려 대학의 시장화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경향신문, 2012, 8, 29, 사설)

카이스트의 잔인한 봄을 통해 우리는 과도한 경쟁주의의 파탄을 목도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경쟁주의는 대학은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살아남는 것의 중요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버렸다. ... 무엇보다 서남표 총장은 이 비극적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져야 한다. (한겨레, 2011, 4, 9,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에서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대학과 교수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들의 진행 방식이 합리성과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은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가 법으로 보장된 것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낮은 취업률이 직선제 총장 탓인 양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개혁을 구실로 교과부가 고분고분한 '관치 총장'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경향신문, 2011, 9, 26, 사설)

물론 총장 직선제가 지고지선은 아니다. ... 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임명권을 틀어쥐고 있

을 때의 손실과 부작용에 비할 건 아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과 민주성의 상징이다. … 이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폐기하려는 것은 그런 부작용보다는,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까닭이 크다. (한겨레, 2012, 7, 14, 사설)

이 신문들의 보도에서 대학 개혁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대학과 교수 사회의 기득권·권위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약화된 대학의 자율성, 민주적 체제 형성과 운영, 대학 교육의 공공성 등을 복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이 본래 가치인 학문, 사회, 그리고 삶에 대한 사유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무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시장화를 목표로 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국공립대의 개혁은 ‘국공립 대학답게’로 향해야 옳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의 존재 이유를 지워 버리는 것이라면 개혁의 방향 착오다. (경향신문, 2011, 9, 26, 사설)

긴 안목에서 대학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학은 그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와 목표를 고민하고 찾는 사유의 장이어야 한다. (한겨레, 2011, 4, 9, 사설)

그러나 <경향신문>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의 한계를 보이는 몇몇 특성도 나타낸다. 먼저 다음에 인용할 첫 번째 사설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 연봉제나 구조 개혁 등 몇몇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정책들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이 실행되는 절차의 합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립적 위치에서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대학 또는 교수 사회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적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보도의 취지는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만, 대학의 문제, 특히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서 기인한 문제까지 그 책임이 정부와 사회보다는 대학과 교수 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돈벌이하는 기업도 아닌 대학의 교수에게 성과급이 과연 합당한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 주된 이유는 교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비롯한다.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 연봉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대학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국립대 교수 사회가 어떤 평가 기준과 방법을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립대 교수 사회의 통절한 반성도 필요하다. 과연 국립대다움이란 있는 것인지, 호봉제 아래서 학문과 교육의 질을 높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1, 1, 6, 사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나 '지성의 요람'으로 불리지 않는다. 대학을 상징하는 이 고색창연한 수식어는 용도 폐기된 지 오래이며, 교수·학생과 대학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무한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학생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목을 매고 있으며, 대학은 수직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등 신자유주의적 광풍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 우리는 경희대의 '존경받는 대학' 실험이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갖가지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하고 싶다. (경향신문, 2011, 8, 8, 사설)

위의 인용문들은 <경향신문>의 보도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취지나 목표하는 바가 다르지만 논리나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향신문>이 기존 대학 평가와는 기준을 달리하는 '대학 지속 기능 지수'라는 대학 평가를 시도한 것도 취지는 다르지만 방식은 동일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해 대항적인 담론을 생산하였지만 대학 개혁 담론을 둘러싸고 언론계에서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먼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압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심각하게 편향적인 언론계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좁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부수의 차이에서도 엇볼 수 있듯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영향력과 <경향신문>·<한겨레>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학 개혁 정책에 대한 보도 건수에서도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비해 대학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신문들이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에 반대하는 외부 칼럼이나 기획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하였지만 이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보도의 양적인 차이는 담론의 질적인 차이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사

용하여 정교하고 견고하게 담론을 구축하였지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생산한 대항 담론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에서 나타나듯이 대항 담론으로서 담론적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에 대한 대항 담론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작동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실질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5. 결론과 논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의 위기를 구성해 내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의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해 냄으로써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의 상식화·자연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다양한 방식의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기존 대학 체계를 둘러싸고 혼재되어 있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탈접합시키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접합함으로써 대학 개혁 담론의 헤게모니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지만 담론의 양적·질적 한계,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헤게모니 담론 투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영역의 성격이 강했던 대학을 시장에 포섭시키려는 목적하에 공적 영역의 산물인 기존 대학 체계들을 개혁의 분명한 대상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들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생산하여 과어휘화, 재단어화, 완곡어법, 은유, 전제, 범주화, 재맥락화, 폄하, 접합, 권위 활용, 책임 전가, 은폐, 백신, 이항 대립, 호명 등 다양한 차원의 담론 전략들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인식과 해석을 지배적이고 불가피한 사회 현실로 구축하는 데에 (일시적이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을 둘러싸고 작동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일

시적이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학 개혁에 대한 신자유주의 담론이 언론에서 독주하고 정권들이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는데 대학을 제외하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은 이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학은 신자유주의 체계로 신속하게 편입되었고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들이 제기하는 대학과 교수 사회의 나태·비리·권위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문제들은 존재하며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반성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을 신자유주의적 질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화하고 이를 빌미로 위기를 구성해 내어 기존 대학 체계를 공격하면서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마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신자유주의 체계로의 편입이 이루어진 현재 대학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과연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상승했는가? 대학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더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대학은 그 구성원에게 더욱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되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는 올랐지만 현재 대학, 사회,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옹호자들은 이러한 문제와 혼란들은 아직 대학들이 충분히 신자유주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기에 더욱더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대한 소위 진보 언론의 상대적 무관심도 생각해 볼 점이다. 대학과 교수 사회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보수 언론에는 비판적 집단이고, 진보 언론에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부재했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진보 언론들이 초중고 교육 체계의 신자유주의화 정책 또는 철도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항 담론 생산에 쏟은 노력에 비해, 대학 체계의 신자유주의화 정책에 대한 대항 담론 생산에 쏟은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국립대 교수들이 철밥통 수호라는 비난 속에 버텼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강압적 압력에 굴복하여 일정 부분 수정이 이루어진 채 국립대의 약탈적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공공 기관과 금융 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의 무관심, 관망, 그리고 공모 속에 독의 한 부분은 이

미 터졌고 물은 모든 분야로 밀려오고 있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 신자유주의 물결은 그와 관계없이 계속 공공 영역으로 밀려올 것 같아 걱정이 드는 것은 괜한 노파심일까?

이 연구는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으로서 그것이 지닌 근본적 한계들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이나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몇몇 흥미롭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또는 이 논문의 대상인 신문들이 생산한 담론들에 대해 현실 속의 주체 또는 독자들이 어떻게 수용·저항·전유하였는지 논의하지 못하였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고 완벽하게 모든 시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반(反)신자유주의 흐름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제도적·정치경제학적 대안들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 대학과 교수 사회에 대해 적대적 논조를 보이는 원인 또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임에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 대표적 보수 언론 두 곳과 대표적 진보 언론 두 곳만을 선정하였기에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해 왔던 〈중앙일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지만 이 연구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지닌 이러한 한계들이 추후에 본격적인 수용자 연구, 생산자 연구, 제도 연구, 정치경제학적 연구 등이 수행되어 극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국진·김성해 (2013). 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3호, 5-24.
- 강내희 (2013). 변혁운동의 거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공간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 <역사비평>, 통권 104호, 65-88.
- 강명구 (2014).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1호, 127-166.
-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호, 7-52.
- 김명인 (2010). 대학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황해문화>, 통권 66호, 137-160.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7.
- 김성해·강희만·이진희 (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 담론: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5권 4호, 39-85.
- 김수미 (2015).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 23권 4호, 67-118.
- 김순우·조병량·한상필 (2010). 대학평가가 대학의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 학연구>, 10권 2호, 139-178.
- 김영욱 (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33-361.
- 김은준 (2012). 신자유주의시대 교육담론과 주체형성: 한국의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천기 (201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자율적 통치성’ 강화. <교육종합연구>, 10권 1호, 119-149.
- 류용재 (2014). 대학의 연구문화 낫설게 하기, 그리고 성찰적 대안의 모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1호, 4-23.
- 박거용 (2005). <350만의 배움터 한국 대학의 현실>. 서울: 문화과학사.
- 박거용 (2009).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향과전망>, 통권 77호, 50-75.
- 박정은·류용재 (2015). 미디어로서의 명품 가방 소비에 관한 연구: 2030세대의 소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1호, 157-193.
- 방희경·유수미 (2015).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위기론’과 ‘희망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37-61.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권 2호, 55-89.

- 서동진 (2009). <자유 의지 자기계발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파주: 돌베개.
- 서보영 (2011). <대학의 몰락>. 서울: 동연.
- 서창원 (2011).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방안 폐기하라. <교수학술4단체 공동토론회 '대학의 위기와 대안' 자료집> (24-27쪽).
- 손석춘 (2009).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론과 비판언론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49-76.
- 손석춘 (2014). 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대학 자본·권력의 '삼각동맹'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1호, 25-56.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통권 89호, 10-45.
- 신진욱·이영민 (2009). 시장포퐁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경제와 사회>, 통권 81호, 273-296.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194-235.
- 양은경 (2012). 스포츠 선수의 초국적 이동과 유연한 민족정체성의 형성: '국가경쟁력으로서의 박지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80-104.
- 오대영 (2015).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평가와 언론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4호, 102-130.
- 유용민·김성해 (2007).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 신자유주의담론과 미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226-251.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이기형 외 (2015).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경험의 문화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2호, 7-51.
- 이도흠 (2011). 신자유주의 체제와 대학의 시장화. <교수학술4단체 공동토론회 '대학의 위기와 대안' 자료집> (5-9쪽).
- 이동연 (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호, 12-38.
- 이상룡 (2015). 대학의 신자유주의 고용구조. <문화과학>, 82호, 100-121.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권 4호, 5-66.
- 이윤미 (2001).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6호, 12-31.
- 이정민·이상기 (2014). 민생 없는 민생 담론: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7호, 88-117.
- 이종임 (2015). <디지털 세대 문화 정체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대학생의 '대외활동'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211-240.

- 임재홍 (2015).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 <문화과학>, 82호, 122-150.
- 정경훈 (2011). 진정한 대학개혁. <교수학술4단체 공동토론회 '대학의 위기와 대안' 자료집> (36-38쪽).
- 정재철 (2007). 한국의 여성 몸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MBC100분토론>의 “몸의 시대, 살빼기와 성형 열풍”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1호, 292-318.
- 정준영 (2010). 대학문화 길들이기: 대학교 신입생활영회로 인한 사고와 언론. <사회와 역사>, 88집, 79-112.
- 정진상 (2005). 대학구조개혁: 비판과 대안. <황해문화>, 통권 48호, 254-274.
- 조성택 (2011). 대학교수 연구업적평가의 문제점: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104호, 89-120.
- 천정환 (2010).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통권 92호, 185-209.
- 한병철 (2015).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becoming)의 통치술: '공모전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431-454.
- 헨리 지루·박현선 (2015). 신자유주의 대학에 대항하는 공공지식인들. <문화과학>, 82호, 151-178.
- 홍덕률 (2004). 대학평가·학문평가를 평가한다. <창작과 비평>, 32권 4호, 64-80.
- 홍성태 (2005). 남북한 지배담론의 정치와 사회적 결과: 반공주의-민족주의-주체사상의 작동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 6권 2호, 193-230.
- 홍종윤 (2011). 방송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권 3호, 349-394.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 Fairclough, N.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Harlow, UK: Pearson.
- Hursh, D., & Wall, A. (2011). Repoliticizing higher education assessment within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cy Future in Education*, 9(5), 560-572.
- Marshall, C., & Rossman, G. (199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Mauksch, Hans (2015). Neoliberalism and higher education: How a misguided philosophy undermines teaching sociology. *Teaching Sociology*, 43(1), 3-14.
- Stern, Mark (2012). “We can’t build our dreams on suspicious minds”: Neoliberalism, education policy, and the feelings left over. *Cultural Studies*, 12(5), 387-400.
- Wodak, R. (2009). ‘Von Wissensbilanzen und Benchmarking’: Die fortschreitende Ökonomisierung der Universitäten. Eine Diskursanalyse.” In R. Diaz-Bone & G. Krell (Eds.), *Diskurs und Ökonomie* (pp. 317~336). Wiesbaden, DE: VS.

# A Critical Study of Media Discourses on 'University Reform'

Focused on Major Newspapers' Reports on University Policies of Administrations from 2008 to 2015

**Oh Hyeo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hat newspapers report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of 'university reform' from February 2008 to December 2015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s results, Donga-ilbo and Chosun-ilbo produce the discourse that the crisis of universities is so real and dangerous that it brings about the crisis of our nation, and that the current university systems should be changed into neoliberal systems because it is the critical reason of the crisis. Using various discursive strategies, they construct their reports as objective, real and embodying general goods and then successfully build the neoliberal discourse on university reform as commonsensical and natural. They finally acquire the discursive hegemony for university reform. Kyunghyang-shinmun and Hankyoreh-shinmun produce the anti-discourse against that of Donga-ilbo and Chosun-ilbo. However, they can not develop substantial hegemony struggles for the discourse of university reform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ir discours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social and press structures overwhelmingly inclined for neo-liberalism.

**KEYWORDS** university policies, university refor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alysis of newspaper reports, neo-liberalism, discursive struggle